

# 북한의 외화수급 추정과 분석: 1991~2012년\*

장형수\*\*

- I. 문제 제기
- II. 북한의 외화수급 추정 시 유의사항
- III. 북한의 외화수급 항목별 추정: 1991~2012년
- IV. 종합 및 분석
- V. 시사점

## 국문요약

본 연구는 장형수(2009)의 추정방식을 수정·보완하여 북한경제의 직접적인 몰락을 가져왔던 구소련권의 해체 이후 최근까지 지난 22년(1991~2012년)간 북한의 외화수급을 추정한다. 북한은 구소련 해체 이후 외화수급이 최악으로 치달자 1995년 대북지원을 호소하고 '고난의 행군'에 들어간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무상지원으로 1997년부터 회복되기 시작한 북한의 외화수급은 2002년까지 상당한 흑자를 축적한다. 2002년 말 다시 불거진 북한 핵문제는 2003~2006년 북한의 외화수급에 일정한 악영향을 미친다. 6자회담 2·13합의로 2007~2008년은 외화수급에 문제가 없었으나, 2009~2010년 북한은 6자회담 결렬과 5·24조치에 따른 원조 금감과 대북제재로

어려운 시기를 보낸다. 그러나 북한은 2011~2012년에는 광산물 수출액 급증과 해외파견근로자 소득 확보 등으로 오히려 상당한 외화수급 흑자를 시현한다. 한편 2013년에도 북한의 외화수급은 상당한 흑자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가 얼마나 지속될지와 북한 핵심부가 실제로 통제할 수 있는 외화수급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자료수집과 분석이 필요하다. 이는 북한경제 관련 가장 중요한 연구과제 중 하나일 것이다.

**주제어:** 북한, 외화수급, 국제원조, 남한

## I. 문제 제기

북한은 1989년 구소련이 실질적으로 붕괴하면서 그동안 북한경제를 지탱해왔던 사회주의 우호무역과 사회주의권 유·무상원조의 혜택을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역사적 격변은 북한 대외무역 총액의 격감을 초래하였으며, 1990년 7월 고르바초

\* 이 논문은 2012년 한양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HY-2012-G).

\*\*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프의 대외무역에서의 경화결제선언은 북한 외화수급의 급격한 악화를 가져와 북한경제를 사상초유의 위기국면으로 몰아갔다. 한편 1990년대 초반의 국제정세는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의 대규모 원조를 바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이 와중에 1992년 시작된 북한의 핵개발 의혹은 무수한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1994년 10월 ‘북미 제네바합의’로 휴지기에 들어간다. 1995년 북한은 홍수 등 최악의 자연재해를 이유로 역사상 처음으로 국제사회에 인도주의적 긴급구호를 요청하게 된다. 한국은행의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에 의하면, 북한경제는 구소련권 붕괴 이후 10년만인 1999년에야 처음으로 플러스 성장을 하게 된다. 2002년 10월에는 제2차 북핵 위기가 시작되었고 2003년 시작된 북핵 6자회담은 2005년 9·19공동성명을 도출해낸다. 2006년 10월과 2009년 5월의 북한 지하핵실험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초래하게 된다. 2008년 이래 한국정부는 대북 식량·비료지원 및 금강산관광을 중단한다. 2010년 정부는 5·24조치로 개성공단 현상유지를 제외한 북한으로의 외화유입을 차단한다.

북한은 (남한을 제외한) 국제사회와의 상품수지에서 1991~2012년의 22년간 약 179억 달러가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적자를 보고 있다. 2005년 이후 북한의 상품수지 적자는 2011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1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으며 2008년에는 그 규모가 사상 최대인 15.5억 달러에 달하였다. 이는 북한의 경제규모에 비해서 ‘엄청난’ 규모인데 이러한 무역적자를 그동안 북한이 어떻게 조달해오고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컸었다.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전반적인 외화수급을 살펴보아야 한다. 하지만 북한의 외화수급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매우 드물다.

2000~2008년의 9개년도 북한의 외화수급을 추정한 장형수(2009)의 연구에 의하면 북한은 일반의 예상과는 달리 무기거래와 마약, 위조지폐 등에서 외화를 조달하지 않고도 90억 달러가 넘는 상품교역 적자를 남한 등 다른 외화수입원을 통하여 충당하였다고 한다.<sup>1</sup> 여기에서 북한의 무기거래수지와 불법수입을 더하면 북한은 2000년 이후에 상당한 외화를 북한 국내외에 축적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본 연구는 장형수(2009)의 추정방식을 수정·보완하여<sup>2</sup> 북한경제의 직접적인 몰락을 가져왔던 구소련권의 해체 이후 최근까지 지난 22년(1991~2012년)간 북한의 외화수급을 추정한다. 본 연구의 추정결과는 1991년 구소련권의 해체, 1990년대

<sup>1</sup> 장형수, “북한의 2000년대 외화수급 추정,” 『비교경제연구』, 제16권 제2호 (2009) 참조.

<sup>2</sup> 본 연구는 전반적으로 장형수(2009)의 추정방식보다 거의 모든 항목에서 북한의 외화수급에 더 불리한 방향으로 추정하였다. 하지만 장형수(2009)의 주요 연구 결과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

중후반 ‘고난의 행군’과 국제사회에의 원조 요청,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1994년 북미 제네바합의에 따른 미국의 중유 지원, 2003년 이후 북핵 6자회담에 따른 대북 경제지원, 2006년 북한의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2010년 천안함 포격사건 이후 한국정부의 5·24조치 등이 북한의 외화수급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 양태 등을 상당부분 설명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 II. 북한의 외화수급 추정 시 유의사항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은 북한의 ‘국제수지’ 추정이 아니라 북한의 ‘외화수급’을 추정해보는 것이다. 우선 본 연구의 외화수급 추정치는 개념상 국제수지표상 ‘외환보유고 변동(준비자산 증감)’뿐만 아니라 ‘오차 및 누락(errors and omissions)’을 포함하게 된다. 이는 우리가 북한 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보유고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sup>3</sup> 또한 국제수지는 실제로 북한 국경을 넘나드는 외화의 유출입을 나타내는 반면, 본 연구에서 추정하는 ‘북한’의 외화수급은 실제로 ‘북한인’의 외화수급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중국에서 영업하는 북한 식당에서 얻은 수익금을 얼마나 북한으로 반입하고 얼마나 중국에서 재투자하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본 연구는 그 수익금만을 추정하여 북한 당국과 북한 주민을 포괄하는 ‘북한인’이 외화를 얼마나 획득하였는지를 추정할 뿐이다. 북한 당국과 북한 주민 간 외화의 분배 상황은 또 다른 흥미로운 연구대상이 될 것이다.<sup>4</sup>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간 외화의 유출입을 북한의 기타 국가와의 거래와는 구별하여 추정한다. 그 이유는 남북한 간 외화거래에 관한 정보는 북한의 기타 국가와의 외화거래에 대한 정보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기 때문이다. 또한 남북한 간 여러 거래 중에서 일반교역수지와 위탁가공교역수지에만 집중하면 북한의 남한으로부터의 외화수급을 거의 모두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들을 제외한 남북한 간 다른 거래 항목들은 대부분 남북한 교역 통계에 계상이 되면서 동시에 경상이전수지와 자본수지에 같은 금액이 반대 방향으로 상쇄되어 북한의 외화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부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북한의 외화

<sup>3</sup> 북한의 외화수급이 양(+)의 값을 가지면 그 해에 북한의 외환보유고가 증가하였거나 아니면 밝혀지지 않은 별도의 외화 지출이 있었다는(또는 둘 다) 것을 의미한다.

<sup>4</sup> 이외에도 국제수지 개념이 본 연구의 외화수급 개념과 다른 점은 다수 있다. 국제수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장형수, “북한의 2000년대 외화수급 추정,” 참조.

수급에 관한 근거자료를 최대한 수집하려 노력하였다. 하지만 북한 외화수급에 대한 기존 추정치는 대부분 몇 년간 평균치, 누적치의 형태로 제공된다. 그래서 본 연구의 추정 결과를 해석할 때 개별 연도의 외화수급 추정치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북한 외화수급의 전체적인 흐름의 변화, 몇 개 연도의 평균치 간의 비교가 더 의미가 있을 것이다.

### Ⅲ. 북한의 외화수급 항목별 추정 : 1991~2012년<sup>5</sup>

#### 1. 북한의 상품수지와 무기수출입수지

북한의 상품교역통계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북한의 교역 상대국의 무역통계로부터 역추정하여 작성한 거울통계를 사용한다. KOTRA는 거울통계를 작성할 때 상당수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국가가 발표하는 북한과의 무역통계가 남북한을 오인하는 등 부정확하기 때문에 이를 자체 검증하여 해당 통계의 정확성에 의문이 제기되면 이를 KOTRA 통계에서 제외한다고 한다. 북한이 무기를 수출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에 위치한다. 무기 수출은 공식적인 무역통계에 잡히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는 무역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KOTRA 통계에는 북한의 무기 수출입이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북한의 무기수출입을 상품수지 외의 별도의 항목에서 추가로 다루기로 한다.

이석·이재호·김석진·최수영(2010)은 KOTRA에서 발표하는 1990~2008년 북한 대외무역 통계치를 재구성하여 새로운 통계시리즈('KDI 시리즈')를 만들었다.<sup>6</sup> KDI 시리즈는 기존 통계에서 북한의 무역으로 잡혔던 항목 중에서 한·중·일 3국의 대북한 무역패턴에서 벗어나는 항목의 통계치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재구성되었다.<sup>7</sup> 본 연구에서는 KOTRA의 북한 대외무역통계를 북한 외화수급 추정에 우선 적용하여 논의를 전개하고, 만약 KDI 시리즈를 적용하는 경우에 본 연구의 분석 결과가 어떻게 영향을 받을 것인지를 함께 보고한다.

<sup>5</sup> 본 연구는 지면의 제약 상 모든 항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포함할 수 없었다. 여기서 언급되지 않은 항목의 추정방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장형수, "북한의 2000년대 외화수급 추정," 참조.

<sup>6</sup> 이석·이재호·김석진·최수영, 『1990~2008년 북한무역통계의 분석과 재구성』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10).

<sup>7</sup> 본 연구는 KDI시리즈 중 가장 신뢰성이 높다는 'Class 1'을 사용한다.

북한의 무기수출입수지는 스웨덴의 스톡홀름평화연구소(SIPRI)가 추정하는 통계를 사용한다. Haggard and Noland(2007)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규상(PSI), 무기 수송으로 의심되는 북한 항공기의 영공통과 금지 등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가 강화된 2003년 이후에는 북한의 무기 수출이 급감하였다고 주장한다.<sup>8</sup> 특히 2009년 북한의 제2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결의 1874호가 발효된 이후에는 선박 검색의 강화로 북한의 무기 수출은 더욱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SIPRI의 북한 무기수출 추정치(2005년 이후)도 이러한 주장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SIPRI에 따르면 북한의 무기수입액은 1990~1991년에 비해서 1992년 이후에는 급감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993, 1995, 1996, 1999년 4개년을 제외하면 모두 1억 달러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90년과 1991년의 북한의 구소련과 중국으로부터의 무기수입액 5.58억 달러와 2.08억 달러는 양국의 대북한 양허성 무기차관에 의하여 지원(결제)된 것으로 가정하였다.<sup>9</sup>

## 2. 북한의 서비스수지

북한의 운송료 수입, 북한을 방문하는 중국인 등 외국인으로부터의 관광 수입,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선박을 임대해주고 받는 용선료 수입,<sup>10</sup> 보험료 및 재보험금 청구 수입,<sup>11</sup> 한국 및 외국 항공기의 북한영공 통과료 수입<sup>12</sup> 등이 북한의 서비스 수입의 주요 항목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자 관광수입 증대를 통한 외화획득에 주력하고 있다. 2010년 4월에는 중국인의 북한 일반관광이

<sup>8</sup> S. Haggard and M. Noland, "North Korea's External Economic Relations,"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07).

<sup>9</sup> 1992~1996년의 북한의 중국과 러시아로부터의 무기도입액도 양허성 무기차관에 의해 결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1992년 이후에는 북한의 무기수입은 전액 현금 결제되었다고 가정한다. 만약 이 가정이 틀렸다면 그 액수만큼 북한의 외화수급은 증가하게 된다.

<sup>10</sup> 북한 선박의 입항, 기항, 통과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조치로 인해 용선료 수입은 감소추세일 것으로 추정된다. 장형수, "UN 안보리 결의 1874호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정책연구』 2010년 봄호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10), p. 80 참조. 그러나 북한은 선박의 일부(25~30척)를 편의치적(선박을 제3국에 등록)하여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 UN Security Council, *Report of the Panel of Experts Established Pursuant to Resolution 2050 (2012)*, S/2013/337 (June 11, 2013), pp. 44~45 참조.

<sup>11</sup> 2008년 12월 북한은 3,920만 유로짜리 재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다. 재보험금은 2009년에 전부 북한으로 송금되었다고 가정한다.

<sup>12</sup> 1998년 4월부터 우리 국적기의 북한 영공통과가 처음 시작되었으나, 북한의 제2차 핵실험 이후 약 2개월간 북한 영공 통과가 금지되었다. 2010년 5·24조치로 북한 영공 통과가 현재까지 금지되고 있다. 2010년 5월 기준으로 영공통과료는 편당 1,000달러 수준이었고, 국적기는 주 135편 정도가 북한 영공을 이용하고 있었다.

재개되었고, 북한 당국은 나선시 자동차 관광 등 새로운 관광루트를 개발하고 있다.<sup>13</sup> 이에 따라 북한을 방문한 중국인은 2009년 96,100명에서 2010년에는 131,100명으로 2011년에는 193,900명으로 급증하였다.<sup>14</sup> 유럽, 싱가포르, 말레이시아<sup>15</sup> 등 기타 국가의 북한 관광객도 같은 기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sup>16</sup>

이외에도 북한은 1994년 10월 북미 간 ‘제네바 합의’에 따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건설 중이었던 경수로 부지에 투입된 북한근로자들의 임금 수입과 북한 주재 영국, 스웨덴 대사관 등 외교시설, 유엔개발계획(UNDP) 등 국제기구, 스위스개발청 등 외국 원조기관 등에 상주하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외화수입, 고용된 북한 직원의 인건비, 기타 업무관련 외화취득 등을 통해 서비스 수입을 얻고 있다.

또한 북한은 중국과 민간 어업협정을 맺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중국어선 1척당 연간 약 2만 달러의 입어료를 받고 약 500여척에게 동해어장을 빌려주었다고 한다.<sup>17</sup> 이후 북한은 2010년부터 다시 중국 어선에 동해 어장을 개방하고 있는데, 이제 중국어선 한 척당 입어료는 4만 달러에 육박하며 중국어선은 2011년에는 1,299척, 2012년에는 1,439척으로 증가추세라고 한다.<sup>18</sup> 미국정부는 1996~2005년에 걸쳐 미군 유해 225구를 발굴하고 그 비용으로 2,800만 달러를 북한에 지급하였다. 한편 북한도 운송료, 선박수리비, 보험료,<sup>19</sup> 재보험료, 북한 권력층 자녀의 외국에서의 교육, 관광, 의료비용 등으로 외화를 지출하고 있다.

### 3. 북한의 소득수지

북한의 소득수지는 주로 중국, 동남아 등에서 운영하는 해외투자기업의 수익과 해외파견 근로자의 임금수입에서 나온다. 북한의 해외투자기업들은 중국, 동남아

<sup>13</sup> 중국여행사의 북한관광상품 판매를 분석한 체계적인 연구가 있다. 김지연, “북-중 관광협력 실태 분석과 전망,” 『KIEP 지역경제포커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

<sup>14</sup> 中國國家旅遊局, 『中国旅游业统计公报』, 각년도.

<sup>15</sup> 말레이시아 일간지 『말레이시안 리저브』에 따르면 2002~10년간 북한을 방문한 말레이시아 여행객은 약 1만 명이라고 한다. 『연합뉴스』, 2013년 6월 26일.

<sup>16</sup>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관광객 수는 2000년대에 들어 부단히 증가했으며 2009년 이후 급격히 늘었다”면서 “특징적인 것은 유럽지역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2013년 2월 19일.

<sup>17</sup> 해양수산개발연구원 북한 전문가의 중국어선 척당 입어료에 대한 최소 추정치를 사용하였다. 최대치는 3.7만 달러 정도로 추정되었다.

<sup>18</sup> 중국 어선의 동해어장 입어는 2013년 7월에 다시 중단되었다. 『연합뉴스』, 2013년 7월 9일.

<sup>19</sup>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선박에 대한 기존의 기항국 통제가 강화되면 북한 선박수리 비용 및 보험료가 증가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제재에 따른 선박의 벌금 지불도 증가하였을 것이다. 장형수, “UN 안보리 결의 1874호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p. 80.

등에 북한음식점, 식품가공, 무역회사, 호텔업 등에 진출하여 외화를 획득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에 산재한 북한의 해외투자기업(북한음식점 포함)은 약 300여 개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들은 수익 대부분을 현지에서 물품으로 구매하여 북한에 반입시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북한은 2000년대 들어와서는 건설회사가 세네갈, 앙골라, 나미비아, 짐바브웨 등에서 대형조형물이나 주요 시설 건설에 참여하여 해외파견근로자 임금수입과 건설 이윤 등으로 상당한 외화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20</sup>

북한근로자의 해외 진출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러시아측 자료에 의하면 1992년에 연해주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던 북한근로자의 수는 1,774명이었으며, 1996년에는 4,144명까지 증가하였고, 2006년 4월에는 약 3,000명이 연해주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한다.<sup>21</sup> 2005년 기준으로 북한은 러시아와 중동지역 등 전 세계 45개국에 약 14,500명의 근로자를 파견하고 있었다. 대부분 건설, 벌목 등 단순노동에 집중되어 있는 근로자들은 월 200~400달러의 임금을 받았다고 한다. 2006년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자 북한은 외화획득을 위해 근로자의 해외파견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sup>22</sup> 특히 2011년에는 중국에서 일하는 북한근로자가 급증하였다.<sup>23</sup> 이는 아마도 우리정부의 5·24조치로 남한과의 위탁가공 사업이 중단되자 일거리가 없어진 숙련근로자들을 중국에 파견하는 것으로 보인다.<sup>24</sup> 2013년 10월 외교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에 제출한 ‘해외파견 북한근로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중국, 러시아, 몽골, 아프리카 등 40여 개국에 46,000여 명의 근로자를 파견한 것으로 추정됐다.<sup>25</sup> 해외파견 근로자가 외화로 받는 임금의 약

<sup>20</sup> 『연합뉴스』, 2009년 10월 16일; 『데일리NK』, 2010년 6월 21일 보도 참조. 실제로 북한은 그 대가로 현금보다는 토지사용권이나 현물로 받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 본 연구는 보도된 액수의 30%를 북한이 실제로 현금으로 수취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월평균 임금도 언론에서 보도되는 액수보다 다소 낮은 금액을 가정하였다.

<sup>21</sup> 또한 하바롭스크주에도 1995년 319명의 북한근로자가 합법적으로 거주하였으며, 1999년에 2,020명까지 증가하였다고 한다. 이영형, 『러시아의 극동개발과 북한 노동자』 (서울: 통일연구원, 2012년 12월), pp. 60~68.

<sup>22</sup> 2012년 9월에 러시아 연방이민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러시아에서 취업 허가를 받은 북한근로자의 수가 2만여 명이라고 한다. 『연합뉴스』, 2013년 4월 24일.

<sup>23</sup> 중국 국가여유국에서 발표하는 통계에는 연간 중국으로 입경하는 북한 주민의 수와 입경 목적이 나타나있다.

<sup>24</sup> 북한 내에서 중국 기업의 주문을 받아 위탁가공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양상이 북한과 중국 간 상품교역수지에 반영되어야한다. 이 경우에는 위탁가공료 수입을 별도의 항목으로 책정하면 이 중계산이 될 것이다.

<sup>25</sup> 러시아에는 2만명 정도가 있으며 대부분은 벌목공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는 1,900여 명의 북한근로자가 생산직 단순노동을 하고 있으며 몽골에는 1,800여명이 건설 분야에서 일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연합뉴스』, 2013년 10월 13일 참조. 본 연구에서는 외교부의 추정치보다

70%는 북한 당국이 여러 가지 명목으로 수취하고 있으며, 근로자도 받은 임금의 일부는 귀국할 때 물품을 구입하거나 현금으로 가져가는 것으로 보인다.

#### 4. 북한의 경상이전수지

##### 가. 조총련 송금 및 조선족, 탈북자, 이산가족의 송금

일본, 중국, 한국 등에 살고 있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조선족, 탈북자, 이산가족은 정기적으로 북한의 가족, 친척에 송금하고 있다. 조총련이 북한에 보내는 ‘충성자금’과 일본 거주 친척이 약 10만 명에 달하는 북송교포에게 송금하는 외화는 1990년대 말까지는 북한의 주요 외화공급원이었으나 2002년 이후 일본정부의 대북제재가 대폭 강화되면서 북한으로의 유입이 급감하였다. 북한 주민이 중국에 있는 친척을 방문한 뒤 받아오는 외화와 약 2만 명으로 추산되는 북한 내 화교에게 전달되는 외화도 있다. 중국 거주 탈북자는 신분이 불안정해서 북한의 가족이나 친척에게 보내는 액수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이나 제3국에 정착한 탈북자나 남한의 이산가족이 보내는 송금액은 적지 않을 것이다.<sup>26</sup> 2012년 말까지 한국에 입국하여 정착비 등 재정지원을 받았던 탈북자는 24,614명에 달하였다. 2009년 추석 상봉을 신청한 이산가족의 수는 85,905명이었으나 2012년 말 현재 생존한 이산가족의 수는 74,836명으로 감소하였다.<sup>27</sup> 한편 북한 지도자들은 정기적으로 조총련에 교육원조비, 장학금으로 상당액을 송금하고 있다고 한다.<sup>28</sup>

##### 나. 국제사회와 중국의 무상원조

국제사회의 무상원조 항목은 세계식량계획(WFP) 등 유엔 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과<sup>29</sup> 중국, 미국, 일본, EU 등으로부터의 양자 간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다.

---

다소 적은 수를 가정한다.

<sup>26</sup> 남한에 있는 이산가족이나 정착 탈북자가 북한에 보내는 송금의 경우는 대부분 중국을 통해서 들어간다.

<sup>27</sup>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sup>28</sup>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지도자들이 재일동포 자녀들의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으로 2013년 4월 13일까지 모두 159차례에 걸쳐 47억 2천 335만 390원을 보냈다고 보도함. 『연합뉴스』, 2013년 4월 13일.

<sup>29</sup> 유엔을 통한 국제사회의 인도지원액 통계에는 한국이 유엔 기구를 통해 지원한 인도지원액이 포함된다. 이는 남북한 교역통계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의 추계방식에서는 이를 북한의 최종 외화수급에 포함시켜야 한다.

중국을 제외한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지원에 대한 통계는 통일부가 추정된 통계 시리즈가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존재한다. 2006년 이래의 통계는 유엔 통계를 사용하였는데,<sup>30</sup> 2008년과 2009년 통계에는 유엔 통계에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 미국의 양자 간 식량지원액을 추가하였다. 한편 각국이 발표하는 인도적 지원액에는 수송비, 관리비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으며, 특히 다자 간 국제기구를 통하여 지원되는 경우에는 국제기구의 관리비, 인건비 등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 한편 국제기구가 집행한 인도적 지원의 일부가 KOTRA 통계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sup>31</sup>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무상지원의 경우는 지원 총액의 15%를 삭감하였다.

중국은 매년 양국 간 고위인사가 방문할 때 정제유, 콕스탄, 차량, 식량 등을 ‘선물’처럼 제공하는 형태로 무상원조를 공여해왔다. 중국의 대북 무상원조 총액은 중국해관통계에 발표된 적이 있었으나, 그 수치가 전문가들의 개략적인 추정치들보다 평균적으로 과소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sup>32</sup>

#### 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및 6자회담 관련 ‘비핵화 지원’

북미 간 제네바합의에 따라 설립된 KEDO를 통한 대북지원액 중 실제로 북한의 외화수급에 영향을 미친 것은 연간 50만 톤에 달하였던 미국과 EU 등의 중유 공급과 북한 실포지역 경수로 건설을 위한 자재반입 및 북한근로자 임금수입 등이다. 경수로 건설 자재반입은 그 대부분이 남북한 반·출입에 기록되므로 여기에서는 제외되며, 북한근로자 임금수입은 북한의 서비스수지에서 이미 다루었으므로 여기서는 미국과 EU의 중유공급만 포함시킨다. 2007년 6자회담의 2·13합의에서는 북한 핵시설의 불능화의 대가로 북한을 제외한 5자가 북한에 중유 100만 톤에 상응하는 중유 및 물자를 무상제공하기로 하였다. 미국과 러시아는 각각 20만 톤의 중유지원을 완료하였으며, 한국과 중국은 각각 14.5만 톤에 달하는 중유 및 중유상당액을 지원하였으나 일본은 중유지원에 응하지 않았다.

<sup>30</sup>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 북한농업동향』, 제14권 제4호 (2013), p. 115.

<sup>31</sup> 2000년 이후 KOTRA 통계에 잡힌 북한 곡물도입량보다 WFP가 집계한 대북한 식량원조량이 더 많다고 한다. 김석진, 『개발원조의 국제규범과 대북정책에 대한 시사점』 (산업연구원, 2009) 참조.

<sup>32</sup> 중국이 북한에 무상으로 공여하기로 약속한 대안친선유리공장 건설비는 2004년 중국해관통계에 계상된 2,400만 달러보다 많은 약 5,000만 달러가 지출되었으며 이를 중국이 전액 추가 부담한 사례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편차를 보정하기 위해 중국해관통계에 발표된 대북 무상지원액의 50%를 추가하기로 한다.

## 5. 북한의 자본수지

### 가. 중국 및 기타 국가의 양허성 차관 공여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1990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약 65만 톤의 원유를 해이룡장성 다칭유전에서 송유관을 통하여 도입하고 있다. 1991~2012년간 북한의 대중 원유 수입액은 42억 달러로 추정되어, 같은 기간 북한 대외무역적자 179억 달러의 23.4%를 차지한다. 이처럼 막대한 원유수입액을 북한이 얼마나 현금으로 지불하였느냐가 외화수급 상 가장 큰 쟁점이다. 북한의 외화수급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북한이 이정도 액수를 매년 중국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을 가능성은 낮다. 아마도 원유는 상업적 거래가 아닌 중국으로부터의 양허성 차관 도입을 통해 결제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본 연구는 이 액수를 ‘전액’ 중국의 대북 양허성 차관 공여로 가정하여 북한의 자본수지에 포함시켰다.<sup>33</sup> 북한의 중국으로부터의 원유수입량은 2004년부터는 연간 52~53만 톤으로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러나 수입액은 2004년의 1.39억 달러에서 국제 원유가격의 급등을 반영하여 2011년과 2012년에는 그 액수가 5.18억 달러와 5.77억 달러에 달하게 된다. 중국은 사회주의권 붕괴 이전에는 우호가격으로 북한에 원유를 매우 싸게 공급하였으나, 이후 중국해관통계에서는 대북 원유수출액을 국제가격으로 고시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이 그동안 우호가격에 의거하여 실질적인 원조 형식으로 공급받던 원유를 갑자기 ‘비싼’ 국제가격으로 계산하여 그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불하였을 개연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된다. 북한의 원유수입량이 거의 일정한 점도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된다. 그렇지만 북한이 비록 전액은 아니더라도 원유공급의 일정부분을 중국에 지급하고 있을 개연성을 배제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북한은 매년 중국으로부터 상당량의 식량을 도입하고 있다. 북한의 대중 식량 도입 분 중 상당수가 상업적 수입으로 보이지만, 일부는 무상원조로 공여되고 있다.<sup>34</sup> WFP는 국제식량원조정보시스템(International Food Aid Information System: INTERFAIS)을 통해 중국이 북한에 공여한 식량지원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이 통계는 중국이 1996년부터 2011년까지 북한에 쌀, 옥수수, 밀, 옥수수제품, 밀가루

<sup>33</sup> 이를 제외한 북한의 자본수지 항목은 국제기구의 대북 양허성 차관, 북한으로의 해외직접투자자와 북한의 대외투자 등으로 그 총액은 크지 않다.

<sup>34</sup> 만약 식량이 무상지원 외에도 식량차관으로도 지원되고 있다면 그만큼 북한의 외화수급에는 추가적인 흑자 요인이 된다.

등 약 325만 톤(곡물 환산치)을 공여한 것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INTERFAIS에 기재된 중국의 대북 무상 식량지원액이 중국 해관통계에 나타난 중국의 대북 식량 수출액보다 많을 때도 있다. 이 경우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먼저 INTERFAIS의 중국 통계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중국의 대북 식량 지원액이 2005년에는 1억 달러가 넘었는데 2008, 2010, 2011년에는 식량지원이 거의 전무하다고 되어있는 등 설득력이 부족하다. 한편 중국 당국은 북한에 무상으로 지원하는 식량을 공식적인 해관통계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주장도 가능하다.<sup>35</sup> 그렇지만 중국 당국이 식량원조 통계를 해관통계에는 누락시키면서 이를 국제기구에는 정확하게 제공하였다는 설명은 일단 전적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INTERFAIS 통계를 중국의 대북 무상원조 추정에 참고는 하지만 사용하지는 않는다. 이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쿠웨이트, OPEC 국제개발기금 등은 북한에 소규모의 양허성 차관을 제공하고 있다. 쿠웨이트는 2002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약 2,100만 달러의 양허성 차관을 쿠웨이트 아랍경제개발기금을 통해 제공하였다. OPEC 국제개발기금은 1998년부터 2006년에 걸쳐 총 5건 약 3,894만 달러의 양허성 차관을 공여하였다.<sup>36</sup> 국제농업개발기금(IFAD)도 1996년부터 2008년까지 북한의 농업개발을 위해 6,910만 달러에 달하는 양허성 차관을 공여하였다.<sup>37</sup>

## 나. 중국 및 국제사회의 대북 직접투자

중국 상무부가 발표하는 대북 직접투자통계는 중국의 대북 직접투자 중 상무부의 승인을 받은 액수만 포함되므로 상당수의 대북 광산투자가 누락되어 있을 개연성이 있다. 중국의 대북 광산투자는 주로 중국 측에서 채굴장비 등 설비를 북한에 ‘직접투자’하여 광물을 채굴한 뒤 이를 중국으로 반입하여 중국 측 투자액을 상쇄해나가는 방식이다. 이 경우 채굴설비의 대북 반입은 북한의 수입과 중국의 대북 직접투자 증가로, 채굴된 광물의 중국 반입은 북한의 수출과 중국의 대북 직접투

<sup>35</sup> 본 연구에 도움을 주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권태진 박사께 감사드린다.

<sup>36</sup> Pyongbuk Irrigation Project, Sinhung-Songgwan Road Project, Pyongnam Irrigation Rehabilitation Project (Phase I & II), Rehabilitation and Expansion of Pyongnam Area Hospital Project 등 5개 프로젝트가 실행되었다. OPEC Fund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Annual Report*, 1999~2008.

<sup>37</sup> Upland Food Security Project(2,440만 달러), Crop and Livestock Rehabilitation Project(2,890만 달러), Sericulture Development Project(1,570만 달러)가 승인되었다. IFAD 홈페이지, <www.ifad.org> (검색일: 2013년 4월 28일).

자 회수(감소)로 국제수지표에 기록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를 감안하여 추정치를 제시한다. 중국의 대북투자는 2000년대 초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6년 10월 북한의 제1차 핵실험 이후 잠시 침체되었다가 2007년 2·13합의 이후에는 회복 추세였으나 2009년 5월 제2차 핵실험 이후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체신성은 2008년 12월 이집트의 오라스콤 텔레콤(‘오라스콤’)과 합작으로 ‘고려링크’라는 통신회사를 설립하고 북한 전역에 이동통신 서비스를 시작하였다.<sup>38</sup> 이집트의 오라스콤이 75%, 북한 체신성이 2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고려링크는 북한에서 급속한 매출 증가를 기록하고 있다. 북한 내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2009년 말의 91,800명에서 급증하여 2012년 말에는 2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오라스콤이 북한에 진출하면서 북한 전역에 휴대전화 사용을 위한 북한 내 통신망 구축 사업에 약속한 투자액은 4억 달러인데, 오라스콤의 발표에 의하면 2011년 말까지 1억 5,300만 달러를 실제로 투자하였다고 한다.<sup>39</sup> 한편 오라스콤의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에 2,700만 달러를 투자하였다고 한다.<sup>40</sup> 그런데 오라스콤도 2009년에 2,595만 달러,<sup>41</sup> 2011년 3분기에 4,150만 달러<sup>42</sup> 등의 상당한 매출을 올려 수익의 일정부분을 본국으로 송금했다고 가정한다. 그래서 본 연구는 오라스콤의 순투자액은 2009~2012년 간 연평균 2,500만 달러 수준의 보수적인 추정치를 제시한다.

#### 다. 자본수지 지출 항목

북한이 해외에 근로자를 파견하기 위해서는 현지에 회사를 설립하여야 하며, 식당, 무역회사 지사 등 현지법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정한 초기 투자자금이 필요하다. 중국 상무부에 보고된 수치에 의하면 2005년까지 북한의 중국투자 실행액 누계는 9,400만 달러라고 한다.

<sup>38</sup> 오라스콤에서는 이를 CHEO Technology Joint Venture로 부른다.

<sup>39</sup> 『RFA』, 2012년 11월 12일.

<sup>40</sup> 오라스콤은 2007년에는 상원시멘트의 지분 50%를 구입하여 2008년에 프랑스 건설회사인 라파즈에 넘긴 적도 있다고 한다(『연합뉴스』, 2010년 3월 16일). 또 오라스콤이 류경호텔 개발권을 확보하고 1억 8천만 달러를 투자해 호텔 외장공사를 끝냈다는 보도도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해 매우 보수적인 추정치를 사용한다.

<sup>41</sup> Orascom Telecom, *Annual Report 2009*, p. 33.

<sup>42</sup> 오라스콤이 2012년 6월 공개한 기업전망보고서, 『RFA』, 2013년 4월 2일.

## 6. 남한으로부터의 외화수급

남북교역 통계는 상업적 거래와 비상업적 거래로 구분된다. 상업적 거래는 일반교역,<sup>43</sup> 위탁가공교역 등 ‘교역’,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등과 관련된 물자의 반출입을 나타내는 ‘경제협력’과 ‘경공업협력’을 포함한다. 비상업적 거래는 민간 및 정부의 ‘대북지원’과 ‘사회문화협력’ 및 ‘경수로 건설’ 비용, ‘KEDO 중유지원’, 6자회담 ‘에너지 지원’ 등을 포함한다. 이들 항목 중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을 제외한 다른 항목들은 남북교역 통계에 계상이 되면서 동시에 북한의 경상이전수지와 직접투자 등 자본수지 등에도 같은 금액이 계상이 되어야하므로 이들은 서로 상쇄되어 북한의 외화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sup>44</sup> 따라서 여기서는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을 통한 외화수급과 남북교역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북한의 남한으로부터의 현금거래를 통한 서비스 수입을 살펴본다.

### 가.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을 통한 외화수급

1988년 남한의 7·7선언 이후 남북교역이 시작된 이래로 북한은 남한과의 일반교역 및 위탁가공교역에서 상당한 흑자를 보았다.<sup>45</sup> 남북교역통계에는 상품수지만이 아니라 운송비, 보험료, 중개수수료 등 서비스수지의 항목들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북한산 모래의 국내 반입에 남한 선박이나 중국 선박이 이용된다면 남한으로의 모래 반입액(북한의 반출)에서 선박운송비는 분리해서 그만큼 북한으로의 외화유입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실제로 모래 반입 시 운송비가 50~70%에 달한다고 한다.<sup>46</sup> 본 연구에서는 북한에서의 반입(북한의 수출)액 중 5%를 운송비, 보험료, 중개수수료로 추정하여 북한으로의 외화유입액에서 제외시킨다. 특히 모래가 다량으로 남한으로 반입되었던 2005~2007년은 운송비 등을 10%로 가정한다.

북한은 남한과의 위탁가공교역을 통해 가공비를 외화로 획득하는데, 본 연구에

<sup>43</sup> 일반교역수지에서 북한으로의 반입은 실제로 우리 기업의 수요이므로 북한의 외화수급에서는 제외하므로 일반교역수지는 북한에서의 반출만 해당된다.

<sup>44</sup> 한국정부나 민간이 국제기구를 통하여 대북지원을 하고 그 지원 품목이 한국을 통하지 않고 제3국을 경유하여 북한에 전달되는 경우는 남한으로부터의 외화수급 항목이 아니라 북한의 경상이전수입에 포함된다.

<sup>45</sup> 남한에서 북한으로 반입된 일반교역품목은 대부분 북한에 투자하는 남한기업이 자체 소요 물자를 반입한 것인데, 이는 북한의 상품수지에 반입으로 계상되는 동시에 북한의 자본수지에도 남한의 직접투자도 동일한 액수가 계상된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북한의 일반교역수지를 통한 외화수급은 북한에서 남한으로 반출되는 일반교역액과 같다고 가정한다.

<sup>46</sup> 본 연구에 도움을 주신 통일연구원의 임강택 박사께 감사드린다.

서는 이를 추정할 필요가 없다. 위탁가공교역액 통계를 사용하지 않고 위탁가공비를 별도로 추정하는 시도도 있었지만 이는 남한에서 북한으로 유입되는 외화규모에 관심이 있을 경우에만 타당하다. 본 연구의 목적인 북한의 외화수급 전체를 보기 위해서 이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다음 거래들을 누락하게 되는 오류에 빠지게 된다. 원부자재 중에는 남한산 외에도 중국산 원부자재 등 제3국의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으며, 반대로 남한산 원부자재로 북한에서 생산된 완제품이 남한을 경유하지 않고 중국 항구를 거쳐서 제3국으로 수출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 경우에도 재화의 흐름이 중국을 거쳤든, 남한을 거쳤든 북한의 국제수지에 모두 포함되어야한다. 위탁가공교역액 전체를 사용해야만 북한 전체 외화수급에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게 된다.

## 나. 금강산관광, 개성관광 및 기타 지역 방문자로부터의 외화수입

1998년 10월 금강산관광이 시작된 후 금강산 관광객 수는 2007년에는 역대 최고인 34.5만 명을 기록하였다.<sup>47</sup> 그러나 2008년 7월 금강산에서 관광객 피살 사건이 발생한 후 금강산관광은 무기한 중단되고 있다. 북한이 수취하는 금강산 관광 관련 수입은 관광대가, 공연료, 상품 판매 수입, 수수료, 북한근로자 인건비, 임대료, 금강산 지구에 체류하는 남한 근로자의 체제비 등이다. 개성관광은 2005년과 2007년의 시범관광을 거쳐 2008년에는 관광객 수가 10만 명을 넘는 등 급성장하였으나, 남한의 금강산관광 중단 조치에 대응하여 2008년 12월 이래 북한이 중단시키고 있다. 금강산, 개성 지역 외에도 2010년 5·24조치 이전에는 매년 상당수 한국인이 사회교류협력을 위해 북한 지역을 방문하여 숙박비, 식대, 교통비, 선물비 등으로 상당한 외화를 지불하였다. 또한 북한에서 공연, 방송, 언론 등 행사가 있을 때는 ‘대가’가 전달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 다. 개성공단 관련 외화수입

한국토지공사는 2004년 3월에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개성공단 부지사 용계약을 체결하면서 부지임대료 1,600만 달러를 지급하였고, 이외에도 공사비, 골재비, 통신비, 체류등록비, 세금, 보험료, 근로자 임금 등에서 북한의 외화수입은

<sup>47</sup> 2000년 남북정상회담 직전에 북한에 송금된 ‘정상회담 대가’ 1억 달러와 현대그룹의 대북사업관에 대한 포괄적 대가 4억 달러를 편의상 금강산관광 대가에 포함하였다.

매년 발생한다. 북측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기본급과 사회보험료, 초과근로 수당 등이 있다. 사회보험료는 근로자와 입주 업체가 각각 기본급의 15%를 북한 당국에 납부한다. 이외에도 가급금(시간외 수당), 근로자 알선수수료 등의 비용이 있다. 또한 거의 매일 개성공단을 방문하는 개성공단 입주업체 관련자들과 상주 직원, 그리고 개성공단 방문자들로부터의 식대, 선물비 등의 외화수입이 있다.

2011년부터는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이 북한 당국에 기업소득세를 납부하기 시작했다. 이 기업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 동안 매년 이윤이 나서 2010년 회계연도에 기업소득세 7,000달러를 부과 받아 2011년에 이를 납부하였다.<sup>48</sup> 2012년에는 이 기업을 포함한 4개사가 약 16만 달러를 북한 당국에 기업소득세로 납부하였다고 한다. 개성공단이 계속 운영된다면 앞으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하는 기업의 수와 그 금액이 급증할 전망이다.<sup>49</sup>

## 7. 북한의 불법행위에 의한 외화취득

Haggard and Noland(2007)는 북한의 아편재배 면적, 현장 판매가격, 아편과 헤로인의 전환비율, 헤로인의 중국 매입가격 등을 분석하여 언론에 보도되는 추정치가 상당히 과장되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북한도 2003년 헤로인 밀반입이 적발된 호주 ‘봉수호 사건’ 이후 내부통제 강화와 함께 마약밀매를 줄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북한의 마약거래는 2000년을 정점으로 감소추세로 돌아서서 2003년부터 급감한 것으로 추정한다. 북한은 미국 100달러 지폐를 정교하게 위조한 ‘슈퍼노트’의 생산국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슈퍼노트를 생산하고 유통시키는데 필요한 비용이 액면가의 60%에 달한다고 한다.<sup>50</sup> 2005년까지 총 5,000만 달러어치의 달러 위조지폐가 색출되었으니<sup>51</sup> 그동안 발견된 모든 위조지폐를 북한에서 생산했다고 가정하더라도 북한의 외화수입은 2,000만 달러에 불과하다. 그런데 국제사회의 감시가 강화되면서 2006년 이후에는 새로 만든 ‘슈퍼노트’가 거

<sup>48</sup>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에 따르면 제조업에 종사하는 입주기업은 결산이윤의 14%를 기업소득세로 납부하게 돼 있다. 다만 이윤발생 연도부터 5년간은 기업소득세를 전액 면제받고, 이후 3년간 50%를 감면받는다.

<sup>49</sup> 개성공단은 2013년 4월 30일 이후 가동이 잠정 중단된 뒤 남북한 간 협의에 따라 4월까지 임금은 지급되었다. 또한 2012년 기업소득세 건으로 400만 달러, 통신료 등으로 170만 달러가 우리 정부에 의해 대납되었다.

<sup>50</sup> D. Asher, “The North Korean Criminal State, Its Ties to Organized Crime, and Possibility of WMD Proliferation,” (Nautilus Institute Policy Forum Online 05-92A, 2006).

<sup>51</sup> S. Haggard and M. Noland, “North Korea’s External Economic Relations.”

의 발견되지 않는다.<sup>52</sup>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한 것처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된 이래 북한은 마약거래와 위조지폐 유통에 대해 상당히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북한의 위조담배나 위조 의약품의 생산은 상대적으로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sup>53</sup>

## IV. 종합 및 분석

### 1. 역사적 사건이 북한의 외화수급에 미친 영향 분석

#### 가. 소련의 경화결제 선언과 ‘고난의 행군’

1990년 7월 소련의 경화결제선언은 북한과 소련 등 사회주의권과의 우호가격에 의한 무역의 중단, 즉 사실상의 원조 중단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북한은 1991년부터 1995년까지 매년 외화수급 상 상당한 적자를 기록하며 5년 동안 누적적자가 8.4억 달러를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sup>54</sup> 소련 붕괴 이전 시기에는 북한이 지금보다는 외화를 적게 보유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이 당시 북한 정권은 외화가 고갈될 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꼈을 개연성이 많다. 1995년 북한이 역사상 처음으로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한 것은 이처럼 당시 외화수급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은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1991년을 시작년도로 추정한 북한의 외화수급 상 누적적자는 1997년까지 지속되다가 1998년부터 흑자로 돌아선다.<sup>55</sup> 북한은 국제사회의 무상지원에 힘입어 1997년부터 ‘고난의 행군’을 공식적으로 마감하는 2000년까지 4년간 17.8억 달러의 대규모 외화수급 흑자를 기록한다. 2000~2001년에는 북한의 외화수급 누적흑자가 10억 달러를 넘긴 것으로 보인다. 북한 정권은 이즈음에 이미 전반적인 외화수급 상 큰 위기는 넘겼던 것으로 보인다.

<sup>52</sup> S. Chesnut, “Illicit Activity and Proliferation: North Korean Smuggling Networks,” *International Security*, Vol. 32, No. 1 (2007), pp. 80~111.

<sup>53</sup>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 위조담배나 위조 의약품의 생산으로 2002년부터 연 300~500만 달러의 불법수입을 얻고 있다고 추정하며 그 수입이 증가 추세에 있다고 가정한다.

<sup>54</sup> 1990년의 북한 외화수급이 상당한 적자를 보였을 것은 확실하나 그 규모를 추정하기가 쉽지 않다. 1990년 7월 소련의 경화결제선언 이후 경화로 결제한 수입액이 얼마인지를 추정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1991년을 분석 시작 연도로 택하였다.

<sup>55</sup> 1990년을 외화수급 추정 대상 연도에 포함시킨다면 아마도 1999~2000년에야 외화수급 누적흑자로 돌아섰을 것이다.

<표 1> 북한의 외화수급 추정(1991~2001년)

(단위: 100만 달러)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무역수지 (대외)	-694	-689	-666	-384	-580	-523	-367	-324	-450	-851	-970
무역수지 (원유제외)	-555	-550	-526	-296	-449	-404	-302	-275	-419	-775	-861
거래성 수지(남한)	100	154	165	156	188	136	146	60	72	89	116
서비스 수지	45	48	50	52	56	61	65	72	288	728	130
소득수지	10	12	13	15	18	20	23	27	30	35	37
경상이전 수지	38	39	40	42	105	219	394	425	504	320	559
자본수지	135	135	146	93	137	127	73	69	54	100	137
자본수지 (원유제외)	-2	-2	6	6	6	8	8	21	23	24	28
외화수지 (소계)	-363	-299	-249	-22	-74	43	337	331	500	423	10
무기수지	-99	91	48	-12	-132	-51	46	89	-159	48	59
불법거래	7	9	12	15	18	23	29	37	45	55	50
외화수지 (종합)	-247	-198	-188	-19	-188	15	413	458	386	527	119
외화수급 누적액	-247	-445	-634	-654	-843	-828	-414	43	429	957	1,077

주: 거래성수지(남한)에는 일반교역수지와 위탁가공수지가 포함되며, 경제협력과 지원성 거래는 제외되므로 자본수지에는 남북 간 투자·경제협력 금액은 제외됨. 서비스수지에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1억 달러와 현대그룹 송금액 4억 달러가 포함됨.

### 나. 국제사회 및 한국으로부터의 대북지원 vs. 대북제재의 영향

2002년 10월 다시 불거진 북핵문제는 미국의 중유공급 중단 등 국제사회 무상 원조(경상이전수지)의 감소를 초래하였으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감시 강화로 인하여 북한의 무기 수출과 불법거래도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2003~2006년 4년간 외화수급 흑자의 합이 2002년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 기간 동안 무기와 불법거래를 제외한 외화수급은 1995년 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북한은 6자회담 2·13합의와 10·3합의에 따른 ‘비핵화 지원’과 남한과의 거래성 교역 흑자의 대폭 증가로 2007~2008년에 다시 상당한 외화수급 흑자를 기록한다.

<표 2> 북한의 외화수급 추정(2002~2012년)

(단위: 100만 달러)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무역수지 (대외)	-788	-837	-817	-1005	-1102	-1103	-1555	-1288	-1147	-740	-1051
무역수지 (원유제외)	-711	-716	-677	-807	-855	-821	-1140	-1049	-821	-221	-473
거래성수지 (남한)	193	206	182	222	319	476	454	331	237	3	0
서비스 수지	134	122	150	204	192	259	252	243	215	272	301
소득수지	43	47	53	60	72	84	116	127	137	165	193
경상이전 수지	389	197	230	213	104	243	443	181	109	175	194
자본수지	108	152	180	270	335	321	492	281	372	555	613
자본수지 (원유제외)	32	31	40	72	88	39	77	43	46	37	36
외화수지 (소계)	82	-110	-19	-32	-78	280	204	-123	-73	433	253
무기수지	201	176	54	22	23	23	24	24	31	31	31
불법거래	48	33	28	26	26	15	16	16	16	16	16
외화수지 (종합)	341	99	63	15	-29	320	245	-82	-26	480	300

주: 거래성교역수지(남한)에는 일반교역수지와 위탁가공수지가 포함되며, 경제협력과 지원성 거래는 제외되므로 자본수지에는 남북 간 투자·경제협력 금액은 제외됨.

#### 다. 이명박정부의 등장과 금강산관광 중단, 제2차 핵실험과 화폐교환 조치

이명박정부 들어 비료와 쌀 지원이 중단되고, 2008년 7월 발생한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은 금강산·개성관광의 중단을 가져왔으나 북한은 외화수급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2008년 말 6자회담이 결렬되고 2009년 5월 북한의 제2차 핵실험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원조 금감으로 2009~2010년 북한의 외화수급은 적자로 돌아선 것으로 추정된다. 2009년 말 민간의 외화보유 금지를 포함하는 북

한의 화폐교환 조치는 당시 북한 외화수급의 악화 또는 북한 정권의 외화통제력 약화와 관련되었을지도 모른다.

## 라. 2010년 5·24조치의 영향과 김정은 정권의 탄생

우리정부의 5·24조치는 2010년의 북한 외화수급 적자에 기여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2011~2012년 북한의 외화수급은 연간 남한으로부터 최소 2억 달러 이상의 외화유입이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연간 3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에 북한은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 확립 등으로 외화수요가 평소보다 많았던 시기로 추정된다. 중국경제의 성장으로 인한 해외 자원 수입·수요 증가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은 북한의 대중국 광산물 수출 급증에 기여했다. 북한은 광산물 수출과 해외파견 근로자 소득 확보 등을 통해 그들이 필요로 하는 외화를 충분히 획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2. 북한의 외화수급 종합

북한은 1991년에서 2012년까지 22년간 (남한을 제외한) 국제사회와의 상품수지에서 179억 달러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적자를 보이고 있었다. 북한의 외화수급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179억 달러에 달하는 상품수지 적자 중 51억 달러는 (남한을 제외한) 국제사회의 무상지원과 ‘비핵화지원’ 등 경상이전수지 흑자로 조달하였다. 중국의 대북 원유공급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북한의 자본수지 흑자는 같은 기간 48억 달러였다. 남한과의 거래성교역수지 흑자는 40억 달러였으며, 이어서 금강산·개성관광, 중국인 관광을 포함한 북한의 관광수입, 해외에서의 대북송금, 운송료 등으로 구성되는 서비스수지 흑자로 22년간 39억 달러를 벌어들였다. 해외식당 운영, 해외파견 근로자 임금 등으로부터 나오는 북한의 소득수지 흑자는 13억 달러였다. 무기거래수지와 불법거래수입은 각각 6억 달러 미만에 불과해 북한의 외화수급에서 가장 비중이 낮은 항목이었다.

무기수지와 불법거래수입을 제외해도 북한의 외화수급은 1991년부터 2012년까지 22년간 14억 달러 이상 흑자였다. 여기에서 북한의 무기거래수지와 불법수입을 더하면 북한은 22년간 28억 달러에 달하는 외화수급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시기별로 보면, 1991~1996년과 2009~2010년은 외화수급이 좋지 않았지만 그 외의 시기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외화수급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최근 2년간

5·24조치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하에서도 상당한 외화수급 흑자를 보이고 있는 것은 지난 1997~2002년의 외화수급 흑자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표 3> 북한의 외화수급 추정(1991~2012년)

(단위: 100만 달러)

	91~93 평균	94~96 평균	97~99 평균	00~02 평균	03~05 평균	06~08 평균	09~10 평균	11~12 평균	91~12 합계
무역수지 (대외)	-683	-495	-380	-869	-886	-1,253	-1,217	-895	-17,931
무역수지 (원유제외)	-544	-383	-332	-782	-733	-939	-935	-347	-13,712
거래성수지 (남한)	140	160	93	133	203	416	284	2	4,016
서비스 수지	48	56	142	331	159	234	229	287	3,945
소득수지	12	18	27	38	54	91	132	179	1,348
경상이전 수지	39	122	441	423	214	263	145	185	5,175
자본수지	138	119	65	115	200	382	327	584	4,893
자본수지 (원유제외)	0	7	17	28	48	68	45	36	674
외화수지 (소계)	-304	-18	389	172	-54	135	-102	343	1,451
무기수지	13	-65	-7	106	84	23	27	31	583
불법거래	9	19	37	51	29	19	16	16	564
외화수지 (종합)	-211	-64	419	329	59	178	-57	390	2,806

주: 항목별 수지는 기간별 평균액이나, 합계 항목은 1991~2012년 전체 합계액임. 거래성교역수지(남한)에는 일반교역수지와 위탁가공수지가 포함되며, 경제협력과 지원성 거래는 제외되므로 자본수지에는 남북 간 투자·경제협력 금액은 제외됨. 서비스수지에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1억 달러와 현대그룹 송금액 4억 달러가 포함됨.

### 3. 북한의 외화수급 추정에 포함되지 않은 주요 항목

북중 간에 성행되고 있는 밀무역은 적지 않은 규모로 보이는데 그 추정이 쉽지 않다. 밀무역은 주로 북한이 중국에서 밀수하는 것으로 북한이 상당한 규모의 적

자를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sup>56</sup> 북한 노동당의 주요 자금원 중 하나는 해외에서의 비밀스런 금괴 판매이다. 미국, 영국, 일본 등은 북한의 금괴판매를 주시하고 있는데 북한이 여기서 얻는 외화수입이 상당하다고 한다.<sup>57</sup> 한편 북한이 한때는 금을 통해 상당한 비공식 외화수입을 얻었지만 현재는 금광이 고갈되었다는 추정도 있다.

북한에 투자하는 남한 기업의 경우 필요한 물자를 남북한 교역을 통해 북한에 보내지 않고 중국 등 제3국을 통해서 우회 투자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한국의 대북 투자가 제3국의 상품수지에 잡힌다. 이 경우 그 액수를 남한의 대북 투자(또는 중국의 대북 투자)에 계상하여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한국의 대북지원이 북한으로 직접 반출되지 않고 중국 등 제3국을 통한 전달되는 경우는 이 액수만큼 북한의 경상이전수지에 한국의 대북 무상지원액으로 증가요인이 된다. 한국정부나 민간이 제3국에서 옥수수 등 식량을 구매하여 한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북한으로 들어가면 북한의 상품수지에는 수입으로 계상되며, 북한의 경상이전수지에는 무상지원의 증가로 계상되어야 한다. 반대로 미국이나 EU의 대북지원물자(KEDO 증유, 6자회담 비핵화 지원 등)가 한국에서 구매하여 남북 비상업적 교역의 형태로 북한에 전달되는 경우에는 그 액수만큼 국제사회의 무상지원액을 줄여야한다.

## V. 시사점

본 연구의 추정 결과에 따르면 북한은 최소한 1997년 이후에는 상당한 외화를 국내외에 축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정 결과에 대해 의아해하는 독자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조금만 개방적인 시각으로 분석해보면 이러한 결과는 오히려 당연할 수도 있다. 북한 정권이 어쨌든 구소련이 붕괴된 이후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현실로 받아들인다면 그 정권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자원인 외화수급에 큰 문제가 없었던 것은 당연한 추론일 것이다. 일반 국가의 경우 무역규모가 증가하면 외화보유액도 이에 비례해서 증가해야한다. 북한의 무역규모도

<sup>56</sup> 북중 간 변경무역은 변경소액무역과 변민호시무역이 있는데 변경소액무역 통계는 중국해관에서 발표하고 있다. 한편 1인당 3,000위안까지 면세 혜택이 주어지는 변경호시무역은 대부분 물물교환이므로 그 규모가 북한의 외화수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sup>57</sup> 미국 재무부가 방코델타아시아(BDA) 사태를 조사하던 중 북한이 BDA에 1억 2,000만 달러 상당의 금을 신고 없이 판매한 것이 드러났다고 한다. S. Haggard and M. Noland, "North Korea's External Economic Relations," p. 32.

1997년부터는 증가추세로 반전된다. 북한의 외화보유액이 이때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것도 우연의 일치가 아닐 것이다.

한편 KOTRA 북한무역통계 대신에 KDI 시리즈를 사용하면 본 연구의 결과는 더욱 강화된다.<sup>58</sup> 1998~2008년 KDI 시리즈에 따른 북한의 무역적자는 KOTRA 통계치보다 22.6억 달러가 줄어든다. 즉, KDI 시리즈를 사용하면 1998~2008년 11년간 북한의 외화수급은 25.5억 달러 흑자에서 48.1억 달러 흑자로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축적된 외화의 일부는 현재 북한의 시장 등 비공식부문에서 유통되는 외화의 주요 공급원이 되었을 것이다. 최근 평양 거리의 변화는 북한 내 빈부격차의 확대와 함께 외부에서 급격한 외화유동성이 유입한데 따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의 대외무역통계에 북한의 장거리로켓(미사일)과 핵개발 부품 수입액이 누락되어있다면 본 연구의 외화수급 흑자액에서 그 액수만큼 공제해야한다. 2012년 말 우리 국방부가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미사일과 핵개발에 28~32억 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런데 실제로 북한이 사용한 ‘외화’는 이보다 훨씬 적을 가능성이 높다. 인건비가 비싸고 최신 기술을 사용하는 서방 선진국의 미사일, 핵개발 비용을 북한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또한 북한의 해외부품 의존도는 그리 높지는 않은 것 같다.<sup>59</sup> 본 연구의 외화수급 결과를 종합하면 북한은 그동안 미사일과 핵개발에 필요한 외화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북한은 외화부족이 심각해진 1995년에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을 호소하면서 내부에서는 외화획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력을 총동원한다. 그런데 ‘외화벌이’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던 반면, 북한 당국이 통제하지 못하는 외화가 국내외에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북한 당국은 무역회사 정리, 노동당·군부에 대한 감찰, 외화사용금지 조치 등을 통해 외화 통제력 확보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화가

<sup>58</sup> 한국개발연구원은 1998~2008년 통계의 신뢰성이 1990~97년 통계시리즈보다 훨씬 높다고 한다. 또한 KOTRA 통계와 비교하기 위해 2001년 북한 수입 통계도 조정하였다. 이에 대한 토론은 다음을 참조. 한국개발연구원, 『1990~2008년 북한무역통계의 분석과 재구성 - 통계집』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10), p. 3; 김석진, “북한 무역통계 해설과 평가,” (한국은행 북한통계 세미나 발표자료, 2013년 7월 30일).

<sup>59</sup> 예를 들면, “2012년 12월 우리 해군이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체의 연료통 등 상당수의 부품을 바다에서 수거한 적이 있다. 예상과는 달리 로켓의 연료통 전체와 엔진의 주요부품은 북한 내에서 제작되었고, 일부 부수장치만 해외에서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형수, “핵개발이 북한의 재정 상태와 정권 안정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정덕구·추수룡 외, 『기로에선 북중관계: 중국의 대북한 정책 딜레마』 (서울: 중앙북스, 2013), pp. 273~281.

당국의 통제를 벗어나는 경우는 북한 무역회사, 무역일꾼 등이 외화를 벌어서 ‘충성자금’으로 상납하고 남겨두는 부분, 수출입단가 조작으로 당국 몰래 외화를 착복하는 경우, 대북 금융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해외근무자가 외화차명계좌를 개설한 후 개인이 착복하는 경우 등 다양하다. 과연 북한 국내외에 축적되어있는 수십억 달러의 외화 중 얼마만큼이 북한 핵심부가 통제가능한지가 향후 북한경제 분야의 중요한 연구과제이다. 여기에 답하기 위해서는 북한 외화수급 항목들을 더 자세히 추정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근래 북한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한 휴대전화 보급의 이면에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외화를 끌어들이려는 북한 당국의 의도가 있었다는 가정이 가능하다. 북한에서 이동전화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우선 독점 판매되는 휴대전화를 외화로 구입하여야하며 서비스 가입비도 외화로 납부하여야한다. 가입비는 140달러이고 휴대전화 가격은 초기부터 하락하여 2012년에 평균 300달러에 팔리고 있었는데, 원가는 80달러 정도라고 한다.<sup>60</sup> 이 계산대로라면 2009~2012년까지 200만 명의 휴대폰 가입자로부터 가입비 2.8억 달러와 휴대폰 판매 차익으로 4.4억 달러 등 총 7.2억 달러의 외화가 4년간 북한 주민들로부터 북한 당국으로 옮겨졌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처럼 많은 액수의 외화가 북한 주민이 한때 보유하고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북한(인)의 외화수급이 아주 어렵지는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2013년 1~8월간 중국의 원유공급을 제외한 북한의 대중무역적자가 작년보다 대폭 축소되었고, 대북제재로 인해 2010년부터 북한의 무역적자는 거의 대부분 대중국 적자인 점을 고려하면, 북한의 외화수급은 2011~2012년의 (연평균 3억 9천만 달러 흑자) 추세를 이어 2013년에도 상당한 흑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러한 과거 추세가 지속가능한지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1991년~2012년 북한의 외화수급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추정해보고자 노력하였다. 비록 추정 결과가 아직 ‘가설’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지만 본 연구가 향후 북한의 외화수급을 더욱 체계적으로 연구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접수: 10월 31일 ■ 심사: 11월 06일 ■ 채택: 11월 18일

<sup>60</sup> “북 휴대전화 100만 시대,” 『동아일보』, 2012년 2월 4일.

## 참고문헌

### 1. 단행본

- 김석진. 『개발원조의 국제규범과 대북정책에 대한 시사점』. 서울: 산업연구원, 2009.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서울: KOTRA, 각년호.
- 이석·이재호·김석진·최수영. 『1990~2008년 북한무역통계의 분석과 재구성』.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10.
- 이영형. 『러시아의 극동개발과 북한 노동자』. 서울: 통일연구원, 2012.
- 한국개발연구원. 『1990~2008년 북한무역통계의 분석과 재구성-통계집』.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10.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 북한농업동향』. 제14권 제4호.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OPEC Fund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Annual Report*. 1999~2008.

Orascom Telecom. *Annual Report 2009*.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port of the Panel of Experts Established Pursuant to Resolution 2050* (2012). S/2013/337, June 11, 2013.

### 2. 논문

- 김석진. “북한 무역통계 해설과 평가.” 한국은행 북한통계 세미나 발표자료, 2013년 7월 30일.
- 김지연. “북-중 관광협력 실태분석과 전망.” 『KIEP 지역경제포커스』. 대외정책연구원, 2013.
- 장형수. “핵개발이 북한의 재정 상태와 정권 안정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정덕구·추수룡 외. 『기रो에선 북중관계: 중국의 대북한 정책 딜레마』. 서울: 중앙북스, 2013.
- \_\_\_\_\_. “UN 안보리 결의 1874호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정책연구』. 2010년 봄호.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10.
- \_\_\_\_\_. “북한의 2000년대 외화수급 추정.” 『비교경제연구』. 제16권 제2호, 2009.
- Asher, D. L. “The North Korean Criminal State, Its Ties to Organized Crime, and Possibility of WMD Proliferation.” Nautilus Institute Policy Forum Online 05-92A, 2006.
- Chesnut, S. “Illicit Activity and Proliferation: North Korean Smuggling Networks.” *International Security*. Vol. 32, No. 1, 2007.
- Haggard, S. and M. Noland. “North Korea’s External Economic Relations.” *Working Paper 07-7*.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07.

### 3. 기타 자료

中國國家旅遊局. 『中國旅遊業統計公報』. 각년도.

中國國家旅遊局. 『1-12月入境旅遊外國人人數(按目的分)』. 각년도.

中國國家旅遊局. 『1-12月來華旅遊入境人數(按年齡, 性別分)』. 각년도.

中國國家旅遊局. 『1-12月來華旅遊入境人數(按入境方式分)』. 각년도.

『동아일보』.

## Abstract

### **Estimation of and Analysis on the Balance of Foreign Exchanges of North Korea for 1991-2012**

*Hyoung-Soo Zang*

This study estimates the balance of foreign exchanges (BFE) of North Korea for 1991~2012 on top of the work of Zang(2009). North Korea had suffered from severe foreign exchange drains since the collapse of the former Soviet Union. As a result, North Korea had to appeal for international assistance in 1995 and declare the 'Arduous March.' Due to the international assistance, North Korea had experienced a surplus in BFE during 1997-2002. BFE worsened during 2003-2006, recovered during 2007-2008 and again worsened during 2009-2010, fluctuated in accordance with the evolution of the North Korea nuclear issue. The 'May 24 Measures' of South Korea put some pressures on North Korea's BFE in 2010, but North Korea instead recorded a significant BFE surplus for 2011-2012 due to a surge in mineral product exports and remittances from workers abroad. This trend is very likely to continue in 2013. However, we need more data and efforts to analyse the sustainability of this trend.

**Key Words:** North Korea, Balance of Foreign Exchanges, International Assistance, Sanctions, South Korea